

I. 21세기를 열며

- 1. 경제학자가 본 2000년14
- 2. 미래학자가 본 2000년16
- 3. 사회학자가 본 2000년18
- 4. 뉴 밀레니엄 트렌드20

II. 한국경제

- 5. 국내 경제 이슈24
- 6. 성장률28
- 7. 물가32
- 8. 경상수지36
- 9. 자본수지40
- 10. 소비48
- 11. 투자52
- 12. 금리56
- 13. 환율60
- 14. 고용·실업률64
- 15. 구조조정68
- 16. 재벌정책·공정거래72
- 17. 중소기업76
- 18. 규제완화84
- 19. 노사관계88
- 20. 통상92
- 21. 한반도정세96

III. 국내 산업

- 22. 경영환경102
- 23. 뉴 비즈니스106
- 24. 벤처110
- 25. 금융114
- 26. 반도체122
- 27. TFT-LCD126
- 28. 이동전화128
- 29. 멀티미디어132
- 30. 인터넷·전자상거래134
- 31. 컴퓨터138
- 32. 가전142
- 33. 자동차146
- 34. 조선150
- 35. 기계158
- 36. 철강162
- 37. 비철금속164
- 38. 석유화학166
- 39. 건설170

- 40. 유통174
- 41. 계약178
- 42. 섬유(면방 화섬)180
- 43. 패션182
- 44. 타이어184
- 45. 시멘트186
- 46. 제지192
- 47. 가구194
- 48. 음식료196
- 49. 화장품198
- 50. 관광200
- 51. 환경202
- 52. 농수축산204

IV. 증권시장

- 53. 증시동향210
- 54. 주도주·유망종목214
- 55. 기관투자가 동향218
- 56. 외국인 투자222
- 57. 채권228
- 58. 코스닥232
- 59. 장외종목236
- 60. 선물·옵션238
- 61. 간접투자상품240
- 62. 증권정책244

V. 부동산시장

- 63. 총론250
- 64. 정부정책252
- 65. 아파트256
- 66. 주택(단독·다세대·전원)260
- 67. 상가262
- 68. 사무실·오피스텔264
- 69. 토지266
- 70. 골프·콘도·회원권268
- 71. 간접투자상품270
- 72. 경매·공매272

VI. 세계경제

- 73. 총론276
- 74. 성장률280
- 75. 국제금리284
- 76. 무역288
- 77. 환율294
- 78. 자본시장298

VII. 국별 전망

79. 경제 블록304	91. 인도네시아.....338
80. 미국308	92. 싱가포르340
81. 일본312	93. 베트남342
82. 중국316	94. 서남아344
83. 독일320	95. 대만348
84. 영국322	96. 오세아니아.....350
85. 러시아324	97. 중·동유럽352
86. 프랑스328	98. 중남미354
87. 캐나다330	99. 중동356
88. 홍콩332	100. 아프리카.....358
89. 말레이시아.....334	101. 중앙아시아360
90. 태국336	

VIII. 국제 원자재

102. 원유364	105. 비철금속.....376
103. 농산물368	106. 펄프380
104. 귀금속372	

부록 IMF 2년 - 평가와 과제

107. 총론384	110. 규제완화.....390
108. 구조조정386	111. 대외신인도392
109. 시장개방.....388	112. 97/99 지표 비교394

협찬기업 명단		동원증권	신한은행	LG텔레콤	한국무역협회	한솔CSN
고려포리머	대한투자신탁	삼성생명	SK그룹	LG화학	한국신용정보	한솔PCS
골드뱅크	대한항공	삼성전기	SK텔레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전력공사	현대전자
교보생명	대이콤	삼성전자	LG그룹	포항제철	한국통신	
국민은행	동양증권	삼성카드	LG전자	하나로통신	한국통신프리텔	
대한상공회의소	동양화재	삼성화재	LG정보통신	하나은행	한국투자신탁	
		신세기통신	LG증권	한국담배인삼공사	한빛은행	*가나다순

성장과 분배 · 자유와 복지 대립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이 한국 사회를 조용한 사회로 남겨두지 않을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넓게 보면 19세기 이후 지속돼 온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20세기의 종료와 함께 갑자기 마무리될 까닭도 없고, 좁게 보면 97년 여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2년만에 완전히 극복돼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의 한국은 기본적으로 99년의 한국과 별 다름없이 격동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격동을 헤쳐나갈 것인가. 크게 보아 세가지 대립되는 입장이 각축하며 2000년의 한국 사회가 취할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이들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는 물론 정치나 문화, 나아가서 교육까지도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한국 사회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산업화의 결과로 얻어진 경제적 풍요를 소외된 계층에게도 나눠주는 재분배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같은 복지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아시아적 혹은 한국적 가치의 계승 및 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앞의 두 가지 입장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들은 민족적 이해관계는 물론 민족적 자존을 지키고 가꿔나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국적 가치의 보편화

이들은 서구적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정서와 의식, 그리고 제도의 피리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작업을 강조한다.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한국적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시키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 가지 입장이 서로 매우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복지' '개인과 계급'과 같은 대립의 축을 가지고 있다. 영국 등에서 소위 '체3의 길'이라는 절충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도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앞의 두 가지 입장 모두가 서구의 역사적 조건에서 탄생한 이데올로기를 문화와 가치와 제도가 다른 한국에 이식하려는 '식민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니 2000년의 한국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도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벌을 해체해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재분배 정책을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닦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교육분야에서는 개발주의 논리를 따라 소수정예를 선 발한 후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0년이 됐다고 이러한 정책의 혼

선이 손쉽게 정리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00년 한국의 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 결과일 것이다. 더구나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여야 모두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의 연이은 발표로 인해 더욱 더 혼란의 미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가 여당의 분명한 승리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치적 불안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2000년의 한국을 지배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문화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의 횡포나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의 개입에 저항하는 새로운 가치를 향한 움직임이 혼란의 밑바닥에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서구적 근대화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복원을 통해 아시아적 가치를 보편화하려는 노력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 될 것이다. □

